

ASEM

ASEM 2차 회의의 결과

서쪽에서 들이치는 자유화 물결

이대훈

한국연대 협동처장

아시아와 서유럽의 정상들이 역사상 두 번째로 회담을 가졌다. 지난 4월 초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이하 아셈)가 그 모임이다. 아셈은 원래 취지대로 하면 유럽과 아시아 두 지역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꾸고자 하기 위하여 2년마다 개최되는 정상들의 협의의 장이다. 아시아는 아시아 나름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짜여진 폐권 구조에 숨통을 마련하고 싶은 의도가 있고, 유럽연합은 또 나름대로 단일통화권을 마련한 발판 위에서 달려와 미국 기업을 제치고 장삿속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서쪽과 교류해서 동쪽의 강한 힘을 견제하고자 했던 동기가 존재했다. 서쪽을 보면, 예를 들어 유럽은 현재에도 그렇거니와 앞으로도 아시아의 큰 시장, 게다가 무기시장과 같은 높은 수익을 내는 큰 시장을 탐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97년부터 불어닥친 아시아 경제위기의 태풍은 아셈이 내심 갖고 있던 의도와 바깥으로 그럴듯하게 내세운 목적을 단 번에 막살하고 말았다.

한국을 비롯해서 경제위기에 처한 아시아 국가들은 아셈을 서쪽을 향한 세일즈 외교 또는 차관외교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지만, 영국 언론의 보도는 '유럽에 돈을 구걸하는 아시아', '아시아의 절름발이 호랑이' 등으로 일관, 아시아를 냉대하기 그지없었다. 퍼티 드리커와 같은 세계적 비평가가 "근본적으로 현재 (아시아의) 위기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 유럽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치달을 때가 살기된다. 나는 아시아가 두렵다"고 말한 것처럼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오래된 사회 병폐와 함께 모두를 긴장시킬 만

한 주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단체들이 제기하고자 했던 인권, 민주화, 환경 보호, 구조조정의 오류 등 ‘비경제적’ 인 주제는 모두 사치품으로 전락하는 듯 보였다.

불과 몇 달 전까지 한국의 경제모델과 아시아의 잠재력을 치켜올리며 찬사를 금치 못했던 세계은행(IBRD)과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아시아인의 근면 성과 질서의식, 충성심을 찬미하며 자신의 우익적인 정치노선을 합리화시켰던 유럽의 정치인들은 한순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아셈의 폐막에 빼맞춰 터진 일본의 “붕괴에 가까운 사태” 앞에서 유럽과 아시아는 그 사이의 거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포럼 – “이윤보다 인간을 먼저!”

한편 거의 같은 시간 거의 같은 장소에서 아시아의 문제와 무역·투자자유화 문제를 달리 논하는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3월 31일~4월 1일 양일간 개최된 아셈민간포럼이 그것이다. 경제위기문제로 묻혀버린 인권, 환경, 평화, 민주화, 민간국제연대가 이 모임의 주제였다. 정상회담과 달리 두 지역의 민간단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도 두 번째도 아니었다. 그 동안의 흐름을 보면, 이 모임은 정부와 기업차원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정한 이념과 원칙에 따른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해서 인간적 민주적 조건을 붙이려는 오래된 국제 민간운동의 일환이었다. 25개국 100여개 노조, 시민단체 대표 1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아셈민간포럼은 영국 정부의 우호적인 대우를 받으며 개최되었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정상회의가 아시아의 강국 중국에 대한 일부 외국 기업과 투자유치 회담으로 전락하는데 대하여 불만을 뜻을 숨기지 않았다. “기업의 목소리 외에도 민중의 목소리를!”, “이윤보다 인간을 먼저!”, “기업을 대표하기보다는 국민을 대표하라!”라는 민간포럼의 모토는 그러한 비판을 담고 있다.

포럼 참가자들은 다국적 기업과 투기자본의 권한이 무한정 확대되고, 외채의 악순환사태가 발생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인권증진의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로 보았다. 정부 규제 약화와 기업권한 확대가 필연적으로 가져올 환경파괴와 실업자, 여성, 아동, 노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취약층에 가해지는 일차적 피해가 우선적인 관심사였다. 그 과정에서 외환위기를 실물경제 위기로 ‘발전’ 시킨 IMF와 미국에 대한 비판은 매 토론시간마다 식을 줄 모르고 제기되었다. 특히 미국정부의 전 통상대표부 대표 미키 캔터가 몇주 전 영국에서 “…서방은

아시아 호랑이 경제의 위기를 서방의 경제적 이해를 재확인하는 황금 기회로 이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알려졌을 때 민간포럼의 분위기는 순간 험악해지기도 했다.

세계화가 노동자, 여성, 아동, 취약계층에 가져온 비극적인 상황에 대하여 각 나라의 생생한 증언을 들었던 아셈민간포럼은 사실상 이 시대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과연 무역·투자 자유화과정이 민주적일 수 있는가? 경제세계화 과정에서 인권이나 노동권이 설자리가 과연 있는 것인가? 외채의 속박을 받는 정부의 대표들은 진정하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가? 비대한 금융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무역자유화 논리는 균수무역의 증가에 어떤 견제논리를 갖는가?"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과연 인류는 자신의 운명을 기업에 맡겨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된다. 정상회담 종료시간에 맞춰 영국 각지에서 모인 1,500여명의 시민들과 민간포럼 참가자들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한때 대영제국의 수도 중심을 가르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영국 노조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기층 소모임 중심의 이러한 대규모 시위는 영국사회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었다.

민간포럼의 결론

민간포럼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셈을 겨냥해서 두 지역의 수백개 민간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만든 공동의 입장 「민중의 전망 People's Vision」¹⁾을 채택했다. 「민중의 전망」은 아셈에 대한 민간단체의 원칙과 입장을 4가지 원칙과 10가지 입장으로 정리했다. 4가지 원칙은 (1)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에서 합의된 경제 사회 문화 시민 정치 권리의 증진, (2)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패턴의 추구, (3) 남녀평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회 평등과 정의, (4) 시민사회 적극적인 참여 보장과 아셈의 투명성 및 국회의 감독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의 입장은 각기 노동자, 여성, 아동 등 민중의 기본적 인권과 평등성을 무역·투자 자유화의 조건으로서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기존의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의 도입, 환경 친화적인 개발전략의 도입, 무역·투자계획 입안과정의 민주화, 무기무역의 통제, 투기자본의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세세히 담겨있다.

1) 자세한 내용은 「민중의 전망」 참조. 한글판은 아셈한국민간포럼의 각 가입단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민간포럼의 대표들은 이를 2차 아셈회의의 의장인 토니 블레이어 영국 총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우닝 10번가 총리관저로 찾아갔다. 그러나 이미 약속된 바를 어기고 블레이어 총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민간대표들은 문서만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가졌을 뿐이었다. 언론의 반응은 경제위기 지원규모와 인도네시아에서의 시위사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정상회의에 관한 보도도 아셈의 원래 의제는 거의 소개되지 않고 경제위기 타개책에 집중해 있었다.

아셈이 각국 정부 정상들의 회담에서 단순한 투자유치 회담으로 전락한 이상, 그리고 21세기 강대국 중국에 대한 유럽의 '감동적인' 일부 분위기 속에서 유럽 연합이 미국 중심으로 짜여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나름대로 개입하기 위해서 세웠던 구상이나, 민간포럼이 제기하는 인권과 민주화의 주제는 주목받기 힘들었다.

한국 경제구조의 취약함과 민주주의의 중요성, 그리고 비판적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던 한국 민간단체 대표들의 역할도 언론의 주목을 받기 힘들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세일즈외교를 성사시키고 한반도 안보문제를 부각하려는 목표를 세웠으나, 정권 초기 실업문제 대처나 경제개혁, 그리고 양심수 석방 문제 등 여러 가지 소극적 태도 때문에 새 정부는 참신한 이미지를 얻거나 외교를 펼치기가 불가능했다. 오랜동안 민주화 투사로 알려진 새 대통령으로서는 남아프리카의 만델라 대통령과 비슷한 외교적 입지를 희망했을 지는 몰라도 아셈 회의 직전 '양심수 문제의 날치기' 처리로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난을 이미 받은 이상 그러한 희망은 거의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으로 보였다.

아셈의 공식 결론

아셈정상회담은 의장 성명서를 통해서 합의사항을 공식화했는데 의장성명서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아셈의 원칙

- 동등한 동반자 관계, 호혜평등, 아셈의 개방성, 아셈의 점진적 발전 추구, 민간기업의 협력 추구

- 정치대화 증진

- 한반도, 캄보디아, 보스니아/코소보 정세 논의 : 평화·안정 위한 협력 다짐
- 화학무기, 핵실험금지협약을 포함하여 지역 안보문제로 논의 확대하기로

- 경제협력 증진

- 투자증진을 위한 고위기업인 투자촉진단 파견
- 「투자촉진행동계획」과 「무역원활화행동계획」 채택 및 조기이행
- 구조조정의 기술적 지원을 위한 아시아신탁기금의 창설
- 그외 국제사안 및 사회·문화적 사안들에 대한 협력 증진

이상의 합의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정책문서 즉 「투자촉진 행동계획」과 「무역원활화행동계획」²⁾이다. 두 문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투자 자유화 노선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외국기업이 투자하거나 무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노동권, 인권, 환경기준에 대한 관심을 전혀 반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이들 정책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되고 있고, 기업권한의 무제한 확대 조치 때문에 세계 각국의 진보적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는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체결될 경우 아셈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이러한 기업자유화 정책을 준수하도록 짜여져 있다. 두 가지 정책문서의 수정없는 채택은 유럽연합이 원하던 목적이 성취된 결과로,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압력활동이 실패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외에 아셈 정상들은 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했는데, 이 성명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해결하는데 IMF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시아 경제위기의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합의하였다. 경제위기의 사회적 충격에 관한 언급은 상당히 특이한 것으로 한편으로는 아셈민간포럼과 같은 사회운동의 비판이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기자본에 대한 아시아정부들의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아셈에 임한 입장을 보면 유럽과의 경제협력을 일차 목표로 해서 외교의 다변화와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을 강조하려는 전통적인 노선에서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다. 특히 신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셈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에는 인권 및 민주화의 가치를 강조하려는 노력이 전혀 명문화된 바가 없다. 이는 한국 언론이 이번 김대중 대통령의 첫 외교를 ‘세일즈외교’로 표현한 것도 완전히 일치한다. 아셈회의 결과에 대한 한국정부의 평가 역시 과거 대통령들의 소극적 외교에 비해서 적극적 외교였다는 점을 부각시켜 과대평가를 하는 것

2) 문안은 외무부 또는 아셈한국민간포럼 가입단체에게 문의하면 구할 수 있다.

외에는 새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어떻게 부각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비록 정부는 바뀌었지만 국제무역과 투자 정책에 관한 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한국 정부는 이번 아셈회의 통해서 잘 보여주었다.

서쪽으로부터의 자유화와 사회운동의 역할

제3세계의 일반적인 사회운동간 국제연대 흐름을 보면 한국의 사회운동은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입장과 대응에서 대단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일국 상황에는 비교적 강하지만 국제무역, 투자,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대응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보여온 우르파이 라운드에서의 출속 협상이나 어설픈 OECD가입을 추가했던 모습과 그 수준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운동은 아직 국제무역질서와 투자정책에 관한 공동의 기초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진보적 사회운동과 정책이 있는 공동전선을 폐기가 힘들고, 때문에 국제적 압력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하락시키고 대다수 서민층의 삶의 질을 시장의 정글법칙에 맡겨버릴 무역·투자 자유화 물결에 대해서 그 물결이 동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인권, 환경,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은 모두 적극적인 공동대처를 하지 못해왔다. 특히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내부의 어려운 조건 때문에 아셈에 거의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 우리에게는 아셈 그 말조차 생소한 판이다. 어려운 내부사정과 소극성, 그리고 생소함이 대다수 국민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대표하지 못하는' 대표자들에게 위임해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시민사회 비판은 치장물로 전락해버렸고, 한 나라 정상들의 회담은 기업대리인들의 회담으로 변질되었다. 그 여파는 지금 서방과 제3세계의 비판적 그룹들이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기업의 지배"로 이어질지 모른다.

"기업의 지배"는 아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 북미주자유무역협정체제(NAFTA),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 선진국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관통하는 '냉전이후 시대'의 주제이다. 이에 대한 사회운동의 핵심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과 사회적 통제"이다. 2년 후 천년의 교체가 시작되는 2,000년도에 분단된 땅의 반쪽 수도 서울에서 3차 아셈이 열릴 즈음, 아시아와 유럽의 다양한 사회운동단체들을 초청해 "세계화, 기업의 지배, 그리고 평화"에 대해서 무언가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 사회운동은 그 짐이 매우 무겁다. ♦♦♦